

문제 10.

10. 피압수자의 참여 없이 증거 분석시,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절차위반을 이유로 증거 능력을 부정할 경우 분석관으로서 사전 조치 및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시간과 장소를 사전에 피압수자, 변호인 등 관련인들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피압수자, 변호인 등 관련인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였을 때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참여 없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영장 집행을 종료한 후 해당 참여권한을 가진 관련인들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참여권 보장을 위해 형사소송법에서는

1.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에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시에는 미리 일시와 장소를 피압수자 등에게 통지해야하며 (단, 참여를 거부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
3. 이러한 통지를 함에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는 장소가
 - 1)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선박, 차량인 경우 그 책임자에게
 - 2) 그 외의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박, 차량일 경우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통지를 해야하며,
 - 3)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 이웃사람 혹은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사전조치로서, 피압수자, 변호인 등 관련인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 서면으로 받아 법정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증거물을 이동하거나 복제, 탐색, 출력 하는 경우에도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위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해당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하며 영장집행이 끝난 이후 압수목록(원본 USB, 이미지 파일 등)을 피압수자, 변호인 등 참여권한을 가진 관련인들에 교부하여야 한다.

대응 방안으로 피압수자, 변호인 등 관련인의 미참여 의사를 포함하여 제출받은 확인 서면을 법정에 제출하여 해당인이 미참여 의사를 밝혔음을 입증하고, 급속을 요하는 때의 상황을 담은 문서를 법정에 제출하여 불가피하게 영장집행에 참여권을 보장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객관적으로 인증된 전문가의 집행과 전문도구의 사용 등으로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하며 압수수색이 종료한 후 압수목록을 교부했던 사실에 대해 증명한다.